

선진국 도약의 10년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반론자료)

2007. 11. 21

대통령 비서실

이 자료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잃어버린 세월'의 목록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의 반론자료입니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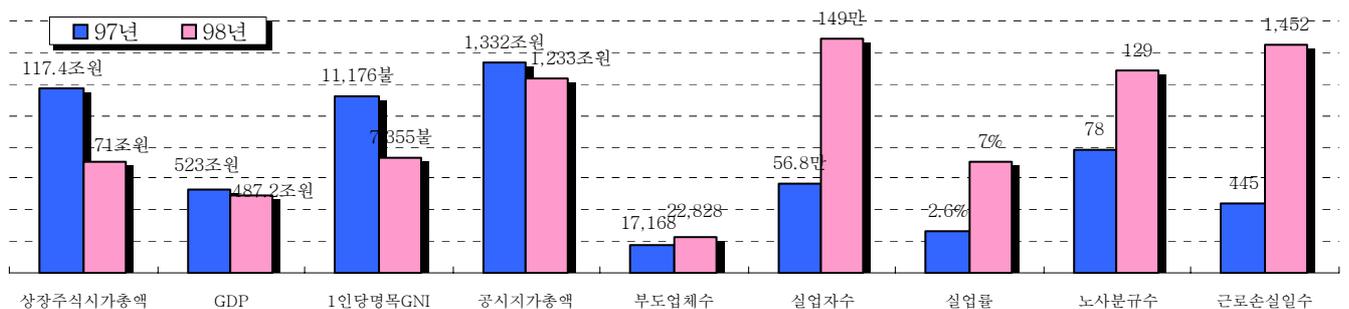
잃어버린 10년과 선진국 도약의 10년	1
1.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5
2. 공평과세 원칙하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14
3.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근본 방안입니다.	18
4. 한 줄 세우기 교육경쟁은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입니다.	23
5. 기업환경은 좋아졌으며, 비정규직·청년실업 문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27
6. 참여정부는 소외계층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4
7.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38
8. 참여정부는 '큰 정부'가 아니라, '책임있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39
9.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남북관계, 한미관계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42
10. 참여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정상화하였습니다.	46
앞으로의 10년	48

잃어버린 10년과 선진국 도약의 10년

- 지난 10년은 외환위기로 인해 무너진 나라를 정상궤도로 올리고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시킨 10년이었습니다.
 - 올라가야될 지표(성장률, 수출, 1인당 국민소득 등)는 올라가고, 내려갈 지표(부도율, 실업률 등)는 내려가고 있음
 - 외환위기로부터 비롯된 소득분배 악화, 비정규직 등 양극화문제도 '05년부터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서 개선되고 있음

- 국가부도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 잃어버린 10년이 있다면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기간('98~'07)이 아닌 외환위기 이전의 10년('88~'97년)일 것
 - 정경유착·정부주도형 경제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했고 인위적 경기 부양을 반복하여 경제불안 지속
 - 준비되지 않은 자유화, 세계화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대결적 남북관계 지속으로 대내외 불안 잔존
 - 외환위기는 경제·사회시스템 구조개혁 실패와 정권의 신뢰도 저하에 기인하였으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
 -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16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1년간 상장주식 시가총액이 46조원 감소하고 GDP 36조원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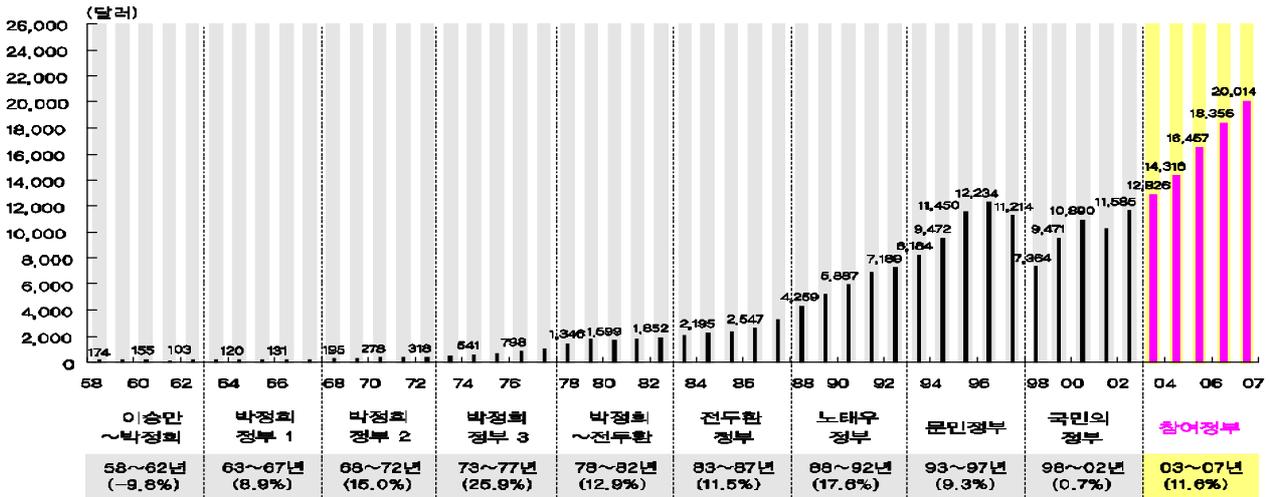
< 외환위기에 따른 주요 지표 변화 >



□ 지난 10년간 카드채, 부동산 등 시행착오도 일부 있었으나, 안정적 국가운영을 통해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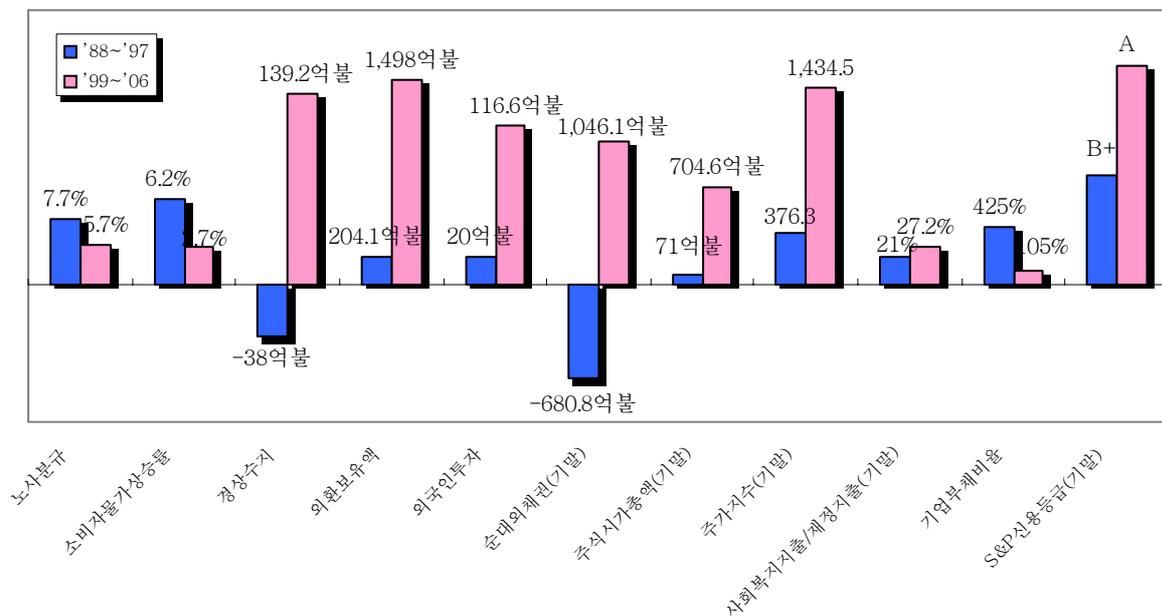
○ 4대부문 구조조정 · 동반성장 전략을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에 진입,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주가 2000시대 개막

< 1인당 국민소득 추이 >



○ 외환위기 이전 10년에 비해 노사분규, 경상수지, 수출, 외국인 투자 등 거의 모든 지표가 획기적으로 개선

< '88~'97, '99~'06간 평균, 주요 지표 변화('98년은 외환위기 영향으로 제외) >



- 결론적으로 10년간 잃어버린 것은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것이며, 정경유착·경제위기·부패정치·냉전구도 등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 한국사회의 분야별 변화 >

【 낡은 시스템 】

【 새로운 시스템 】

경제	정경유착형 낡은 경제	⇒	혁신주도형 경제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	국가균형발전
복지	가족의존형 최소복지	⇒	사회투자국가
정부	최소 정부, 규제하는 정부	⇒	책임있는 정부
사회	권위주의	⇒	공정·투명한 사회
평화	남북간 냉전적 대결구도	⇒	한반도 평화협력체제의 진전
개방	수동적 개방	⇒	능동적 개방

※ 선진국의 4대 조건과 우리나라의 위치

- 국제기구에서는 명시적인 선진국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 다음의 4대 조건을 충족하면 선진국으로 인식
 - ① **IMF Advanced Economies**: IMF는 '선진국(Advanced Economies)'과 '기타 신흥시장 및 개도국(Other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Countries)' 두 개의 범주로 국가를 분류
 -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29개국이며,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5개국
 - ② **OECD 회원국** : OECD는 '선진국 클럽'으로 불려왔으며, 경제성장론의 실증분석시 선진국 범주로 자주 활용됨
 - 현재 회원국은 30개국이며,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2개국
 - * 1만불 이하의 국가도 다수(헝가리, 슬로바키아, 터키, 멕시코) 포함되어 있어 회원국 모두를 선진국으로 보기에 한계
 - ③ **국민소득 2만불** : 통상적으로 상기 ①, ② 기준이 겹치는 영역인 2만불이상 국가를 선진국으로 인식
 - * 일반국민의 55%가 2만달러를 선진한국의 기준으로 인식(05.5월 설문조사)
 - '05년 현재, 1인당 소득이 2만불 이상인 국가는 24개 정도이며 OECD 평균은 3.1만불 수준
 - * 세계은행은 국민소득 \$10,726 이상을 고소득국, \$3,466~10,725 중상위소득국, \$876~3,465 중하위소득국, \$875 이하 저소득국으로 분류(WDR, 2007)
 - ④ **高 Human Development Index** : UNDP는 93년부터 HDI를 발표해왔으며, 지수가 0.8이상인 국가를 高HDI 국가로 분류
 - '06년 보고서에서 高HDI 국가는 63개이고, 한국은 총 115개국 중 26위(0.912)를 기록
- 우리나라는 ①, ②, ④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금년말로 ③ (국민소득 2만불)까지 충족할 것으로 예상

1	(한나라당 주장) 성장과 희망을 잃고 양극화와 절망을 얻었습니다.
	⇨(반론)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혁신주도형 경제, 능동적 개방, 균형발전 등 동반성장 전략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도록 경제체질을 개선
 -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종합주가지수 2,000, 수출 3,200억불, 국가 경쟁력 11위 등은 우리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줌
- 외환위기로 인해 본격화된 양극화문제도 적극적 사회투자전략을 통해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 양극화는 세계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
 - 양극화가 급격히 진행된 계기가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집권기에 발생한 외환위기
 -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공론화하고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최초의 정부로 '05년부터 분배율 등 각종 지표가 개선
- 요소투입형, 정경유착 등 외환위기 이전 10년간의 경제운영방식으로는 앞으로의 10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 산업화 시대 성장일변도·무한경쟁 전략으로 국민들의 희망을 되살리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음
 -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분배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위기를 초래

1-1. 우리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발전단계 · 경제규모 ·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① 4~5%대 성장률은 경제규모, 발전단계 감안시 적정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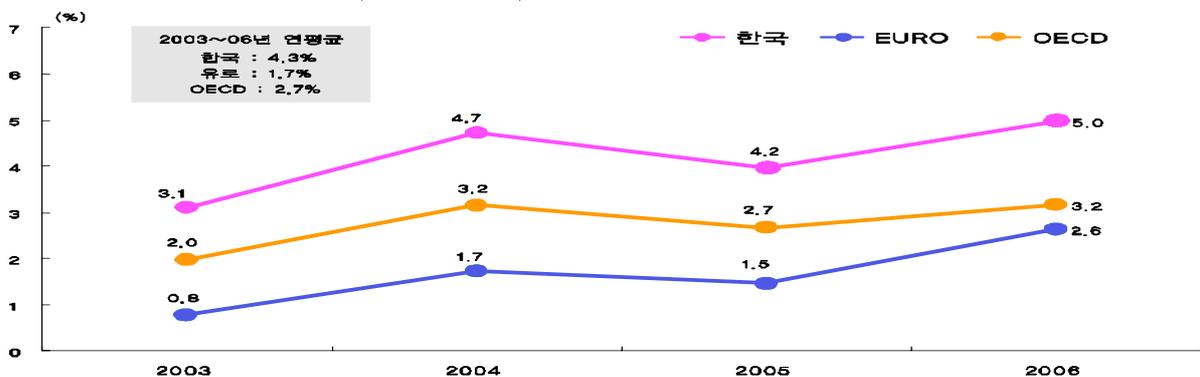
- 지난 4년간 신흥시장 · 개도국(IMF 기준)의 평균성장률은 7.5%이나, 우리를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후발개도국과 비교할 수는 없음
 - 대학생이 된 후에도 중학생처럼 계속 키가 커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격
- 참여정부 4년('03~'06)간 평균성장률 4.3%는 선진국(IMF 기준)의 2.6%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고 30개 OECD 회원국 중 9위

* 우리나라는 IMF 편제상 선진경제권(Advanced Economies)에 속해 있음

	'03	'04	'05	'06	'03~'06평균	'07(전망)
세계경제 성장률(IMF)	4.0	5.3	4.8	5.4	4.9	5.2
선진경제권(IMF)	1.9	3.2	2.5	2.9	2.6	2.5
기타 신흥시장 및 개도국(IMF)	6.7	7.7	7.5	8.1	7.5	8.1
한국 성장률	3.1	4.7	4.2	5.0	4.3	4%대 후반

- 대부분 선진국들이 '80년 전후 1만불을 넘으면서 성장률이 2~3%대로 둔화되었으나, 우리는 1만불 달성 이후에도 5% 내외의 성장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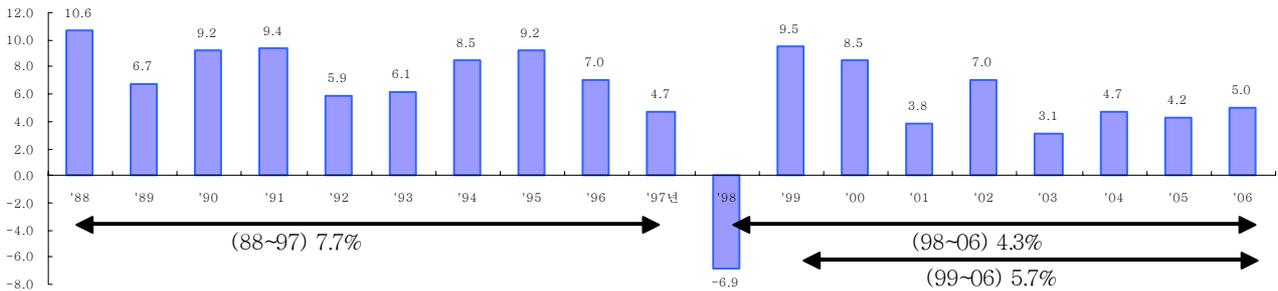
< 한국, EURO권, OECD 연평균 성장률 >



② 과거 10년과는 성장의 내용, 대외환경 등이 전혀 다름

- 80~90년대 3저(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시대 성장률과 2000년대 고유가, 고달러, 저출산율 시대 성장률 비교는 부적절
 - 대외여건 등을 감안할 때 '88~'97 성장률 7.7%와 '99~'06 성장률 5.7%만을 단순 비교하여 과거 10년이 부진했다고 할 수 없음

< '88~'06 GDP 성장률 >



- 무리한 압축성장의 부작용으로 97년 외환위기 발생
 - 외환위기 이전 우리 경제는 외형적으로 고성장이었으나, 기업·금융·공공부문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 상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중단 없는 기업·금융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경제체질을 크게 개선
 - 부실금융기관을 퇴출하고 금융감독을 선진화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제고
 - 차입경영 관행 근절로 기업 재무구조가 견실해지고 지주회사 제도, 외부통제 및 회계 투명성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도 개선

< 기업 부채비율 추이 (전산업, %) >

97말	98말	01말	02말	03말	05말	06말
424.6	336.4	195.6	144.7	131.3	110.9	105.3

* 상장등록법인 부채비율 : 07.6말 86.2%

- 외환위기 당시의 국가부도상태에서 벗어나 세계 5위 외환보유액 확보

* 외환보유액 : (97.12.18) 39억불 → (02말) 1,214억불 → (06말) 2,390억불 → (07.6말) 2,507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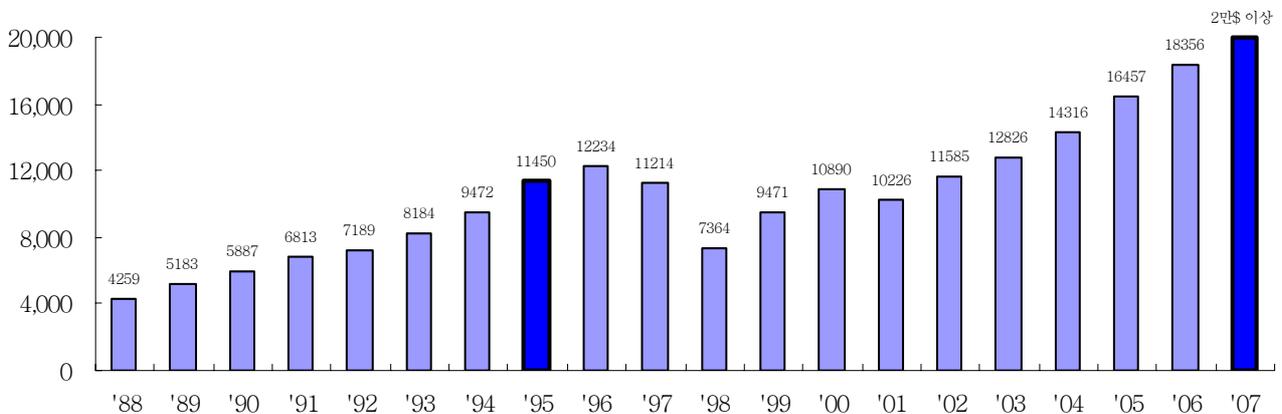
③ 무리한 단기 경기부양 없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

- 무리한 경기부양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남기고 경제체질을 약화시켜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작용
 - 참여정부는 과거정부와는 달리 인위적 부양의 유혹을 뿌리치고 안정기반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경제체질을 강화했으며, 위기 관리는 빈틈없이 했음
 - 거듭되는 경제위기론에 따라 단기부양책을 동원했다면 우리경제는 지금과 같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을 것임
- 단기 부양책의 실패 경험
 - (노태우 정부) 12.12 조치(증시부양책), 4.4대책(경제활성화 종합대책)
 - (김영삼 정부) 신경제 100일 계획
 - (김대중 정부) 신용카드 규제완화, 부동산 투기억제시책 완화

④ '07년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 예상

- 최초 1만불 돌파 후 12년, 외환위기 10년 만에 2만불 달성
 - 원화 강세에 2만불 소득의 원인을 돌리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것. 일본 등도 국민소득 상승에 환율의 역할이 있었고, 오늘날의 환율은 외환위기 전의 시기와 비교하면 정상적인 것
- * 1만불 → 2만불 달성시 환율요인 : (일본) 55%, (싱가폴) 32%, (한국)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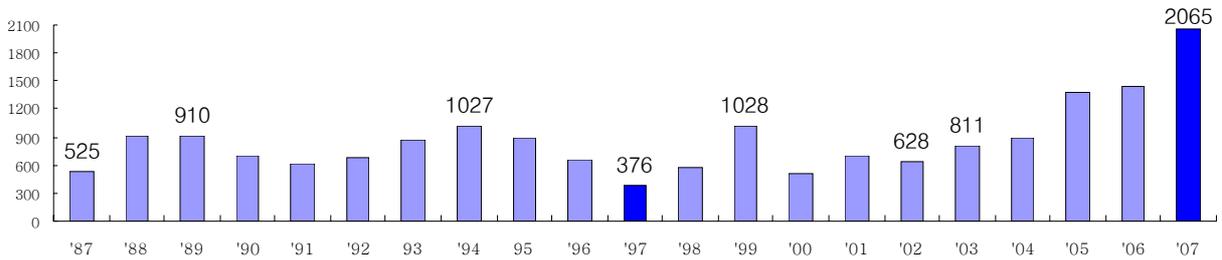
< 1인당 국민소득 추이(단위 : \$) >



□ 참여정부기간중 KOSPI지수는 3배이상 상승했으나,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집권기에는 1/3로 하락하였습니다.

- 건실한 거시경제 운용으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고, 핵심 역량 위주 구조조정, 회계기준 선진화 등 기업의 수익성·투명성 제고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북핵 관련 증시 저평가(Korea Discount) 요인 해소

< KOSPI지수 추이 >



* 년도말 기준, '07년은 10월말 기준 KOSPI지수

□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신용불량자 문제도 안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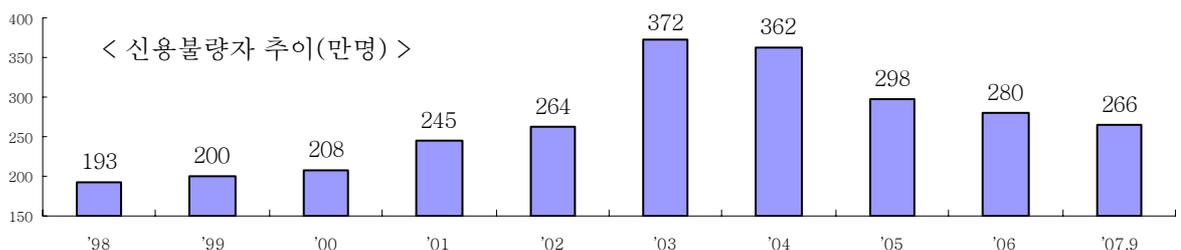
- 국민의 정부 시절 무리한 경기부양과 신용 위험인식 부족,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라 신용불량자 문제가 발생

* 경제성장률(%) : (98) △6.9 (99) 9.5 (00) 8.5 (01) 3.8 (02) 7.0 (03) 3.1%
 민간소비(%) : (98) △13.4 (99) 11.5 (00) 8.4 (01) 4.9 (02) 7.9 (03) △1.2%

- 시장시스템의 붕괴와 도덕적 해이의 위험을 경계하여 재정지원을 통한 신불자의 구제를 지양하고 시장원칙*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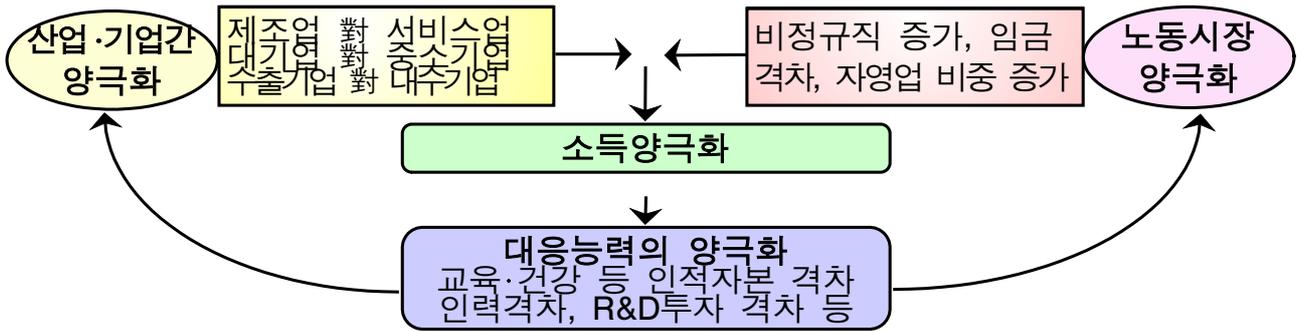
* 민간이 설립한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다중채무자의 채무재조정

- 신용불량자 숫자는 383만명('04.2)에서 266만명('07.9)까지 하락하여 안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1-2.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현상은 사회지출 확대를 통한 적극대응으로 점차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양극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나,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각 부문의 양극화가 상호작용하면서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국정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사회지출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사회투자 :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과거의 시혜적 복지개념에서 탈피, 사회복지를 선제적 투자로 인식

○ 사회지출 매년 20% 증가(일반예산 증가율 11%의 두 배)하였으며, 사회지출이 전체예산의 28%, 정부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 차지



- GDP대비 공공사회지출이 '98년 5.5%에서 '05년 7.3%*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공공사회지출 : '98년 5.5% → '01년 5.4% → '03년 5.7% → '05년 7.3%

** 선진국 수준(01): 미국 14.8%, 일본 16.9%, 스웨덴 28.9%, OECD평균 21.2%

□ 사회지출 증가 등에 따라 소득분배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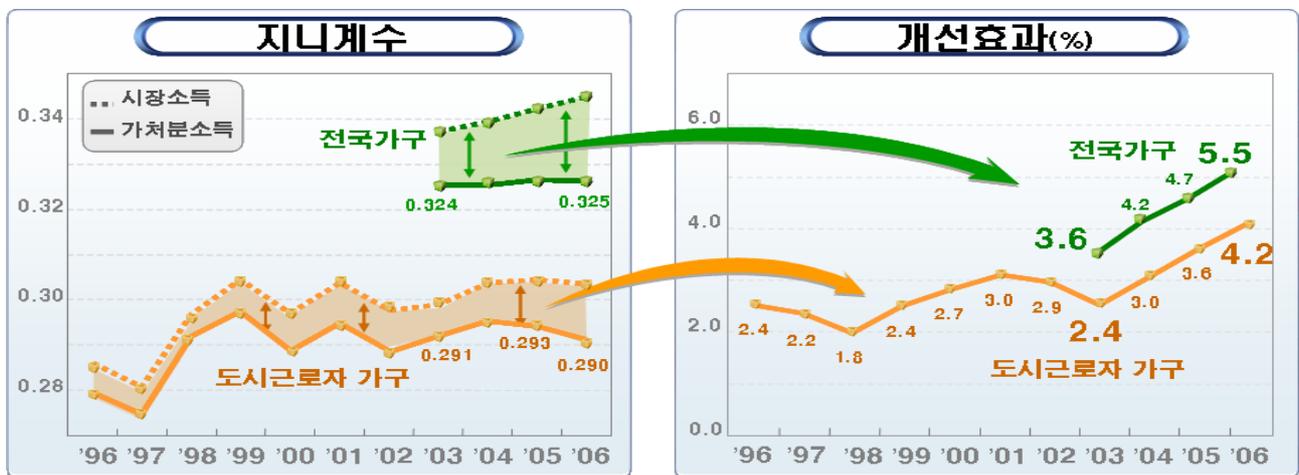
- 빈곤추이를 나타내는 절대빈곤율·상대빈곤율이 최근 들어 하락하는 추세

<도시근로자가구의 빈곤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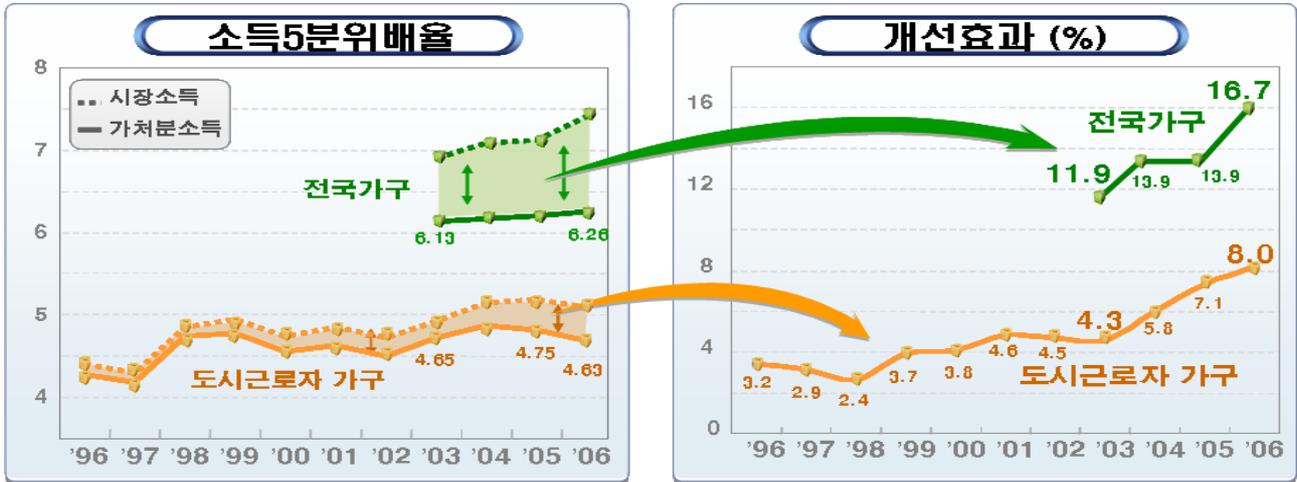


- * 절대빈곤 - 최저 생계비 기준(3년마다 재계측), 최저 생계비가 인상되면 절대빈곤율 증가
- * 상대빈곤 - 중위소득 기준(OECD :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층 소득이 증가해도 상대빈곤율 증가

- 특히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가구의 실제 소비지출과 관련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지니계수 개선 효과(전국가구)가 '03년 3.6%→'06년 5.5%로 증가



- 소득5분위배율 개선효과(전국가구)도 '03년 11.8% → '06년 16.7%로 증가



- *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
- *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 지표와 가처분소득 기준 지표와의 차이를 통해 공적이전소득, 직접세, 사회보장세 등 정부정책의 효과를 알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성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보호·육성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을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개편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

-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유형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시책 추진, 기술혁신 역량강화, 시장중심의 벤처확인제도 도입 등

- 중소기업 수익률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 ('97)0.4 → ('02)3.39 → ('05)3.87 → ('06)3.45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로 수출이 1,000억불을 돌파

- * 중소기업 수출(억불) : ('97)569 → ('02)683 → ('05)921 → ('06)1,042

- R&D 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강화

- * 중소기업기업 부설연구소(개) : ('97)2,278 → ('02)8,863 → ('05)10,894 → ('06)12,398

※ 한나라당의 개인파산, 생계형 자살 증가 주장의 오류

① 한나라당 주장 : '06년 26만명 개인 파산신청

⇒ 06년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12만명으로 26만명이 아님

* 개인파산신청자 수 : (02년)1,335명→ (03년)3,856→ (04년)12,317→
(05년)38,773→(06년) 123,691명→ (07.8월 현재) 146,654명

⇒ 개인파산신청 증가는 파산절차 간소화, 파산절차에 대한 인식 확대, 재판부의 탄력적 운영 등에 따른 것이며, 회생과 면책을 통한 파산자 구제가 활발해진 정책적 효과

◇ 최근 파산 절차 개선 ◇

- 05.3월 통합도산법 제정*(06.4월 시행) 등 관련 제도가 정비
- 05.12월 법원에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의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자가정의 채무자 등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

② 한나라당 주장 : 빈곤층 전략 서민이 생계형 자살 선택

⇒ 자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원인에 따른 자살은 소폭 감소

* 경제적 원인에 따른 자살자수(경찰청)
- ('02) 968 → ('03) 1,157 → ('04) 1,197 → ('05) 1,128

⇒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05.9)·추진중

- 생명존중 문화조성, 우울증 및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및 상담 체계의 구축 등

2	(한나라당 주장) 세금폭탄, 생계비 폭등, 일자리 고갈...이제는 못살겠습니다.
	⇨(반론) 공평과세 원칙하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기간중 세율인상 등 세금폭탄은 없었습니다.

○ 국제적인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 등 세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법인세율 : ('01년 개정) 1%p인하, ('03년 개정) 2%p인하

* 소득세율 : ('01년 개정) 1~4%p인하, ('04년 개정) 1%p인하

○ 인위적인 증세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국가 세원을 차질 없이 확보한 것임

○ 과세기반 확대는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부동산 과세 강화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

* 신용카드 사용액(조원) : ('97) 38.2 → ('06) 276.3 → ('07상) 148.5

* 현금영수증 사용액(조원) : ('05) 18.6 → ('06) 30.6 → ('07상)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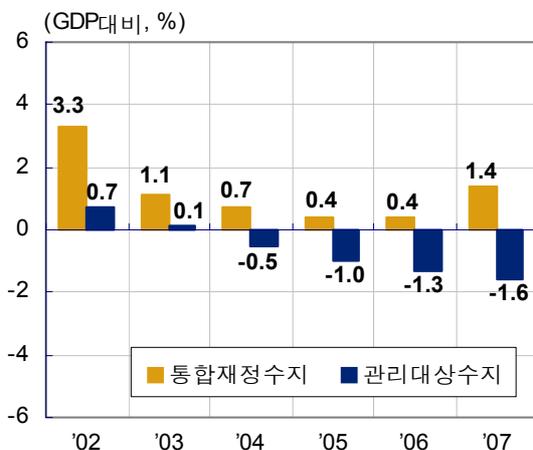
□ 재정수지 · 국가채무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 흑자 기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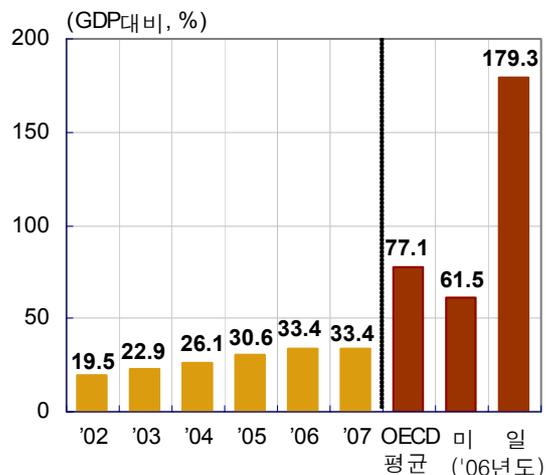
국가채무비율은 OECD 국가 평균(77.1%)의 절반 이하 수준

*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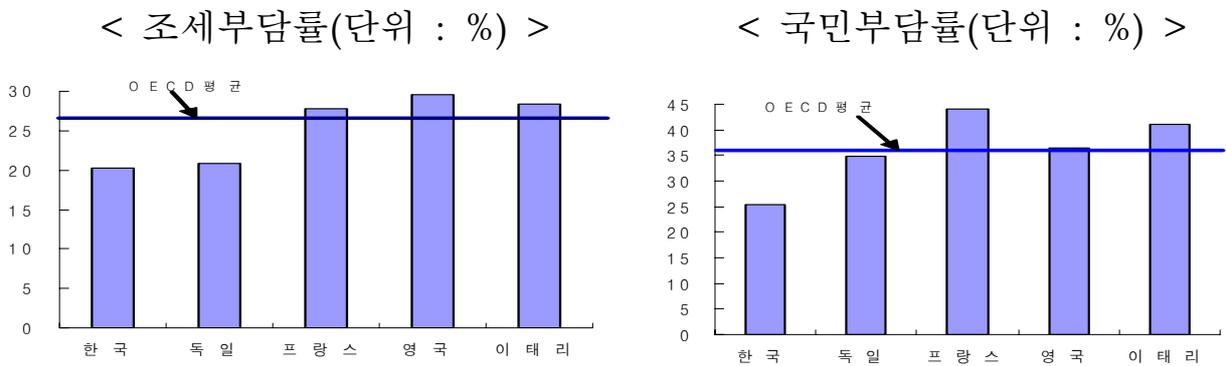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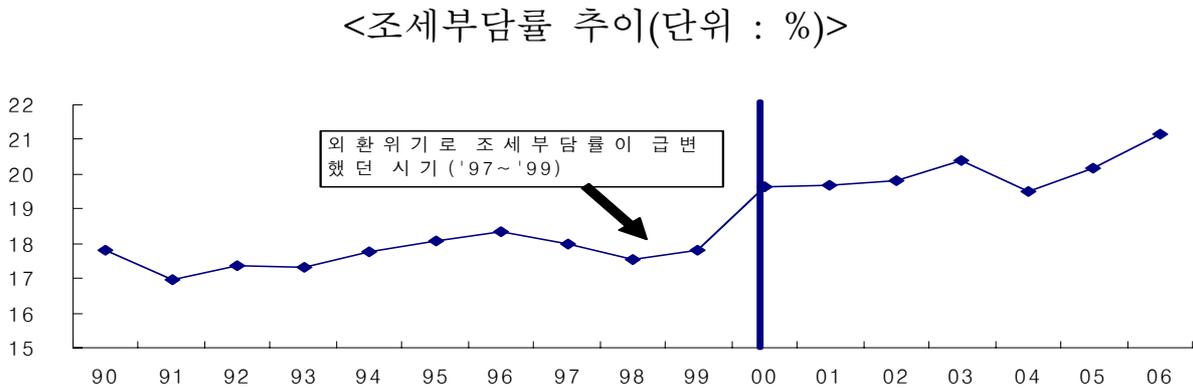
2-1.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부담증가 속도도 과도하지 않습니다.

□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도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조세부담률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 OECD 30개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26.9%) 및 국민부담률(36.2%)과 비교시 현저히 낮은 수준 (조세부담률 26위, 국민부담률 29위)



□ 조세부담률 증가속도도 '00년 (19.6%)부터 '06년 (21.2%)까지 총 1.5%p 증가하여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만, '07년 조세부담률이 이월세수, 부동산 세수 등 특이요인에 따라 '06년 대비 1%p 상승할 것이나, '08년 이후 21%대로 안정될 전망

	'06	'07 ^e	'08 ^e	'09 ^e	'10 ^e	'11 ^e
• 조세부담률	21.2	22.2	21.8	21.7	21.8	21.9

(%)

* OECD평균 조세부담률('05년 기준)은 26.9%

2-2.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극복 또는, 외환시장안정, 서민주거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가했습니다.

- 국가채무 증가의 대부분(78%, 132조원)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소요이거나 외평채 등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입니다.
 - 순수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은 18%, 30.5조원 수준에 불과
 - 세출구조조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재정 효율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중 (4년간 45조원 이상 예산절감)

< 국가채무 증가내역(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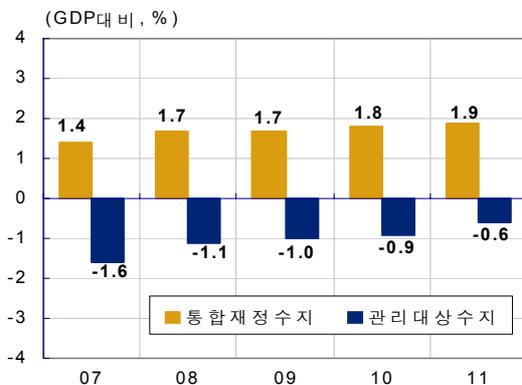
	'02년말	'07년말	증가액 (비중%)
○ 국가채무	133.6	302.0	168.4 (100)
▪ 공적자금 국채전환	-	52.7	52.7(31)
▪ 외환시장안정용	20.7	89.6	68.9(41)
▪ 국민주택기금	34.0	44.5	10.4(6)
▪ 기타	78.9	115.3	36.4(22)

<국가채무 성질별 현황('07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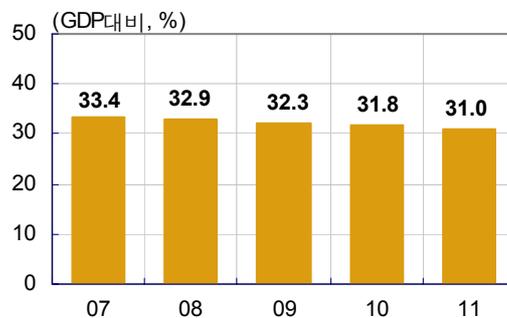
적자성 채무 129.1조원 (42.7%)	공적자금 국채전환	52.7(17.5%)
	일반회계 적자국채	56.9(18.8%)
	기타	9.3(3.1%)
지방정부 채무		10.2(3.4%)
금융성 채무 172.9조원 (57.3%)	외환시장안정용	89.6(29.7%)
	국민주택채권	44.5(14.7%)
	기타	38.8(12.8%)

-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로 재정수지 · 국가채무는 향후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 재정수지 전망('07~'11) >



< 국가채무 전망('07~'11) >



* 자료: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한나라당의 세금폭탄 주장의 오류

① 한나라당 주장 : 도시근로자의 저소득층마저도 100원을 벌어서 15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음

⇒ 5분위 계층중 최저계층 (1분위)의 소득대비 조세비중은 1.1%에 불과

* 공적연금과 사회보험포함시에도 5.4%수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06년 소득분위별 통계)

② 한나라당 주장 : 08년 국민 1인당 세금 434만원 부담

⇒ 세금부담 총량은 경기가 후퇴하지 않는 한 소득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증가세의 둔화로 인해 1인당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

③ 한나라당 주장 : 조세연구원도 세금폭탄 경고

⇒ 한나라당에서 전체내용중 필요한 일부분만 인용하는 등 편향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

⇒ 조세연구원 보고서에서는 개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

* 조세연구원 연구결과 : '02년 조세부담률 99.6, 적정수준 100

⇒ 예산정책처 연구결과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분석을 제시

* 예산정책처 연구결과 : '05년 조세부담률 20.2, 적정수준 21.1

3	(한나라당 주장)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론) 일찍 잡지는 못했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근본방안입니다.

- 참여정부는 근원적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로, 주택 공급 불일치*에 따른 가격불안이 주기적으로 발생
 - * 수도권 주택보급율('05)은 96.8%(서울 89.7%)로 주택재고가 여전히 부족
 - 참여정부는 행복·혁신·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지역전략산업육성 등으로 지역의 자립기반 확충
 - * 행복·혁신·기업도시 조성으로 '12~'13년간 40만명, '20년까지 100만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추정
- 투기억제, 시장투명화, 주택공급확대 등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했습니다.
 - 중부세 도입과 과표 현실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
 -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0년까지 연평균 37만호를 공급하는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 금융규제 등 수요관리와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등 공급체계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수급 체계 구축
- 시행착오는 일부 있었지만, '06년 말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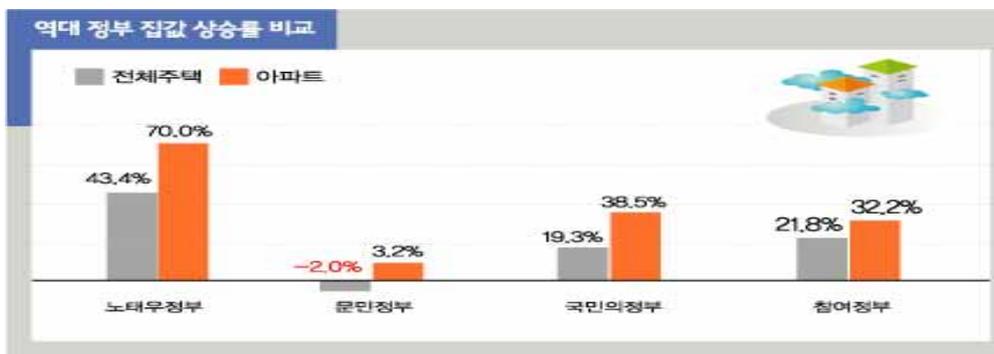
< 부동산 가격 관련 참고자료 >

①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유동성 증가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



- * 일본은 '90년대 자산가격 버블붕괴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 * 독일은 통일비용 부담으로 상승률 1% 수준

② 과거 정부(노태우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참여정부 수준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 기록



③ 참여정부 기간중 지가상승의 대부분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부분으로 실제 오른 부분은 19%에 불과

- 땅값 상승 1,365조원의 대부분(88%)은 '03~'06년 사이의 참여정부의 부동산 시장 투명화 등에 따른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이며, 동 기간 중 실제 지가 상승분은 296조(19.1%)에 불과

구분	2003년 초	2007년 초	상승액 (상승률)	상승분	
				공시지가 현실화분	지가 상승분
공시지가 총액	1,545조 8천억원	2,911조 3천억원	1,365조 5천억원 (88%)	1,069조 1천억원 (68.9%)	296조 4천억원 (19.1%)

< 참여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

연도	주요 정책	내용
'05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수요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6억원이상 대상 확대 ○ 주택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까지 연 30만호 공급, 5년간 택지 4,500만평 공급 ○ 거래투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06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31 보완대책 ○ 주택거래 신고지역 자금조달계획 신고 ○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방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까지 수도권 164만호 공급 ○ 신도시 택지개발기간 단축, 분양가 인하
'07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지역 민간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1건 제한 ○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방안(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까지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 공급 ○ 주공 등 공공부문의 분양주택 공급 확대 ○ 서민층의 임차자금 보증지원 확대

3-1.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은 절반 수준이며, 최근 부동산 세금 증가는 투명성 제고·세제 합리화에 따른 결과입니다.

□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수준은 절반 이하입니다.

-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수준은 0.28%로, 미국(1.0~1.5%), 일본(1.0%) 등 선진국과 비교시 절반이하 수준

<보유세 시가대비 실효세율 비교*>

한 국			미 국	캐나다	일 본
전체	종부세대상자	재산세대상자			
0.28%	0.71%	0.21%	1.0~1.5%	1.0%	1.0%

* 우리나라는 공시가격대비 실효세율을 기준, 시가대비 실효세율 적용시 더욱 낮은 수준
 ** OECD “재산과세”의 범위는 부동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및 선박·항공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비교 곤란

-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높지 않은 수준(양도세 실거래가액 과세 대상 주택 보유세대는 전체의 4%)

□ 참여정부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관련 조세 비율은 15.6%로 역대 정부들(문민정부 : 15.8%)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02년 대비 '06년 총조세는 1.3배 증가하고, 부동산 관련 세수는 19.6조원('02년)에서 32.5조원('06년)으로 1.7배 증가

<역대 정부별 총조세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단위:조원) >

정 부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기 간	'88~'92	'93~'97	'98~'02	'03~'06
총 조 세	165	354	551	642.6
부동산 관련 조세	24	56	71	100.6
총조세 대비 비율	14.5%	15.8%	12.9%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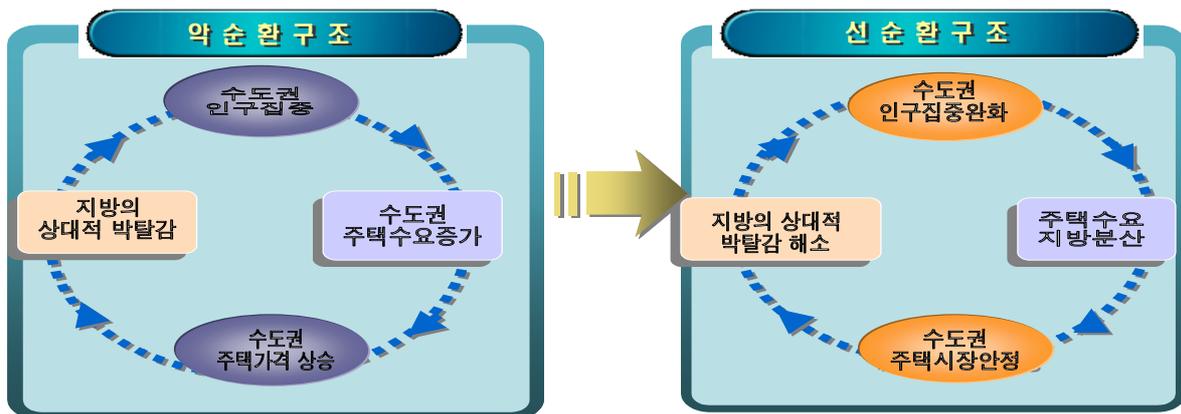
□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제 합리화를 추진했습니다.

-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제고
-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기조하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세제합리화 및 조세형평성 제고

3-2.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부동산 양극화의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 참여정부는 수도권·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등을 추진했습니다.
 - 수도권 인구집중에서 기인한 지역간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혁신·기업 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
 - 보유세, 양도세 개편 등 세제합리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등 과표현실화를 통해 자산가치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응능원칙)을 제고
- 향후 균형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그 효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입니다.
 -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와 지방의 주거·생활여건 개선은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과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효과를 가져올 것
 - 더욱이,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 확고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

<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선순환구조 전환 >



※ 한나라당의 버블거주와 부동산 정책의 상관 주장에 대한 반론

◆ 정책결정자의 버블거주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참여정부의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대책 시행이후 버블 7지역의 아파트값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	(한나라당 주장) 사교육만 있고 학교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러기만 있고 가족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론) 튼튼한 공교육만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줄세우기 교육 경쟁은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입니다.

- 참여정부는 문민정부시 수립된 5·31 교육개혁('95)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및 학벌주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2008 대학입시 제도 개선, 방과후학교 확대, 영어교육 혁신방안을 추진
 - 궁극적으로 대학 서열화에 따른 한 줄 세우기 대입제도가 개선되고 학벌주의가 사라져야 사교육 부담 및 조기유학 문제가 완화
- 아직까지 사교육비 문제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공교육 정상화만이 올바른 길입니다.
 - 2008 대입제도를 통해 학교 내신 비중을 강화하고, EBS 수능방송의 높은 출제율로 활용도를 높이며, 교원평가제 등 능력중심의 교원정책 혁신 등으로 지역·계층간 교육격차를 줄이면서 사교육·조기유학 수요 억제에 주력
 - 특히, 급증하는 영어교육 수요충족을 위해 영어교육 혁신방안(06.11)을 추진중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경제특구내 영어몰입교육 실시 예정
 - 교육정책은 단기적 처방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교육의 내실을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참여정부는 그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
- 자립형사립고 확대, 고교등급제 실시, 본고사 부활 등 한나라당 교육공약이 추진되면, 사교육·조기유학문제는 견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4-1. 사교육 대책, 아직 미흡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입시제도 개선과 학벌주의 해소를 추진중이며, 향후 정책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실질 내신반영비율 제고 등 현행 대입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대학 입시 3원칙을 확고히 유지하여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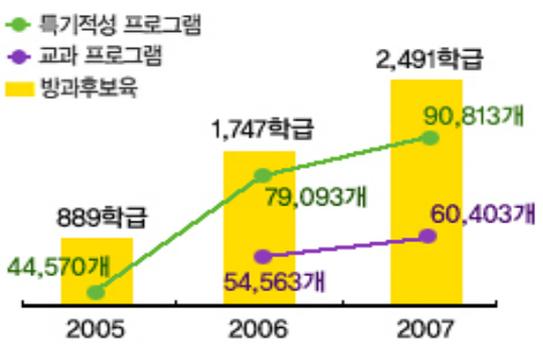
*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50%이상 반영대학비율 '07 18.8%(38개교) → '08 65.8%(150개교)

○ 교원평가 등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틀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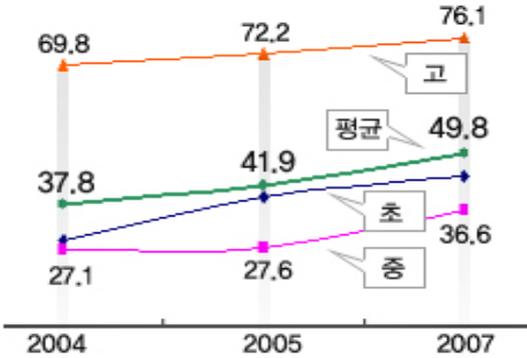
* 「사교육비 경감대책('04.2.)」, 「사교육 의존도 완화방안('07.3.)」 등 수립 시행중

* 교원 평가 선도학교 운영 '06년 67개교 → '07년 506개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수 증가〉



〈방과후학교 학교 참여율〉



출처 : 실록 교육정책사(국정브리핑)

□ 또한, 외고 대책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중이며, 기회균형선발제 등을 통해 사교육으로 인한 기회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자사고 확대·본고사 허용 등 입시경쟁을 강화하는 한나라당 방식으로는 사교육 문제를 심화 우려

* 연도별 추이에서 특목고 수가 급증한 '01년 이후 사교육비 지출이 급증

4-2. 영어교육 혁신, 제주영어교육도시 등을 통해 조기유학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 세계화에 따른 외국어 습득, 국제적 안목 배양 등을 위해 해외 조기 유학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조기유학 사유: 외국어 습득 28%, 국제적 안목 25%, 국내교육 불만19%('05, KEDI)

* 초중고 조기유학생: 3,274명('97) → 29,511명('06)

□ 조기유학에 대응하기 위해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영어교육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어교육의 낮은 실용성 외에도 영어관련 사교육 급증, 지역간·계층간 영어학습 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

* 영어사교육 비율: 서울 80%, 광역시 64%, 중소도시 61%, 읍면 43%('06)

* 초등 6학년 영어과 학업성취도 우수학력 비율('04년): 대도시 49.9%, 읍면 33.8%

○ 또한, 경제특구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등에서의 영어 몰입교육을 통해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중

< 영어교육 혁신방안('06.11.3) 주요내용 >

- ① 현직교사 재교육 강화, 임용시험 개선 등을 통해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체제 구축(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 배치)
- ② 영어능력 인증 시험 도입, 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해 실용영어교육을 강화
- ③ EBS 영어교육 전용방송을('07.4) 개국
- ④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구축 등을 통해 영어학습 격차 해소

※ 한나라당의 사교육비, 조기유학생 통계 관련 오류

- ① (한나라당 주장) 사교육비 연간 30조원
 ⇨ (반론) 통계의 일관성이 없으며, 과다추정 우려
- '03년과 '06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통계는 연구기관, 표집 등이 상이하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며 일관성 없음
 - 연 사교육비* 추정액 30조원은 과다 추정될 우려
 - * 가계 월평균 부담액(통계청 가계수지동향) × 12개월 × 전체 가구수(1,600만)
 - 월평균 부담액은 납입금을 제외한 “교재비, 보충교육비, 문구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 의미보다 포괄적
 - 가계수지동향 조사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농어를 제외
- ② (한나라당 주장) 조기유학생 13배 증가, 여행수지 적자 급증
 ⇨ (반론) 증가추세가 과장되어 있으며, 여행수지 적자는 조기유학 보다는 환율, 국민소득 증가 등 다른 요인에 기인
-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유학생 숫자가 급감한 '98년을 기준으로 13배 증가 주장은 증가 규모를 과장하는 측면
 - * (95) 2,259 → (96) 3,573 → (97) 3,274 → (98) 1,562 → (02) 10,132 → (06) 29,511
 - 06년 여행수지 적자 73억불중 조기유학에 따른 부분은 일부분
 - 여행수지는 유학·연수수지 외에 일반 여행수지(06년 49억불) 포함
 - 유학·연수수지도 대학생 등 성인까지 포함한 수지
 - * 유학·연수수지 적자(억달러) (95) 9.1 → (96) 11.0 → (97) 11.4 → (98) 7.9 → (99) 8.7 → (00) 9.3 → (01) 10.6 → (02) 14.1 → (03) 18.4 → (04) 24.8 → (05) 33.7 → (06) 44.3 → (07.상) 23.7

5	(한나라당 주장) 기업은 가난해지고, 일자리는 없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은 늘었습니다.
	⇨(반론) 기업 환경은 좋아졌으며, 비정규직·청년실업 문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 정경유착 차단,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정착을 통해 어느 때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KOSPI 지수 2000, 국가경쟁력 11위, 국가신용등급 A 등급 회복, 어음부도율 하락 등 우리의 기업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임

(단위 : 개, %)

구 분	97	02	03	'04	'05	'06	'07.9
부도업체수	17,168	4,244	5,308	4,445	3,416	2,529	138
어음부도율	0.4	0.06	0.08	0.06	0.04	0.02	0.02

* 자료 : 전국기준,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후), 한국은행(어음부도율 동향, 3.21)

- 출충제* 등 기존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신규규제는 없었음

* 지주회사 등에 대한 졸업제도 도입, 대상기업 축소, 출자한도 확대(순자산의 25% → 40%) 등

- 다만,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보건 규제 증가로 규제수는 증가

-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국가신용등급도 A 등급을 회복

* 매출액대비 경상이익률(제조업, %) : (90) 2.34 →(93) 1.70 →(96) 0.99 →(97) △0.34 →(98) △1.84 →(03) 4.68 →(05) 6.50 →(06) 5.69

* 국가신용등급()는 등급 상향시점

S&P(05.7) : A- → A, Fitch(05.10) : A → A+, Moody's(07.7) : A3 → A2

□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도 대응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고용없는 성장'은 산업구조 고도화·선진경제 진입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과거처럼 성장만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은 어려움

- 기업이 10억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일자리 수가 '90년 68명에서 '05년에는 31명으로 크게 감소

* 국가별 고용계수('05) : 일본 14명, 독일 13명, 미국 11명

○ 참여정부는 '성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고용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혁신형 중소기업 창출·기업환경 개선 대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을 강화하는 한편,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발굴·육성하고 실업시에도 재취업 확률을 높여주는 직업안전망으로서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 선진화의 전기를 마련

- 실업률·고용율 등 주요 고용지표도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

* 실업률 : 7.0%('98)→3.7%('04)→3.5%('06)

* 고용율 : 56.4%('98)→59.8%('04)→59.7%('06)

○ 비정규직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임금·복지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차별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입법'도 제정

-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의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노사정의 사회적 타협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

○ 청년실업률은 7%대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눈높이 불일치 해소, 대학 구조개혁 등에 따라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5-1. 우리 기업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007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 기업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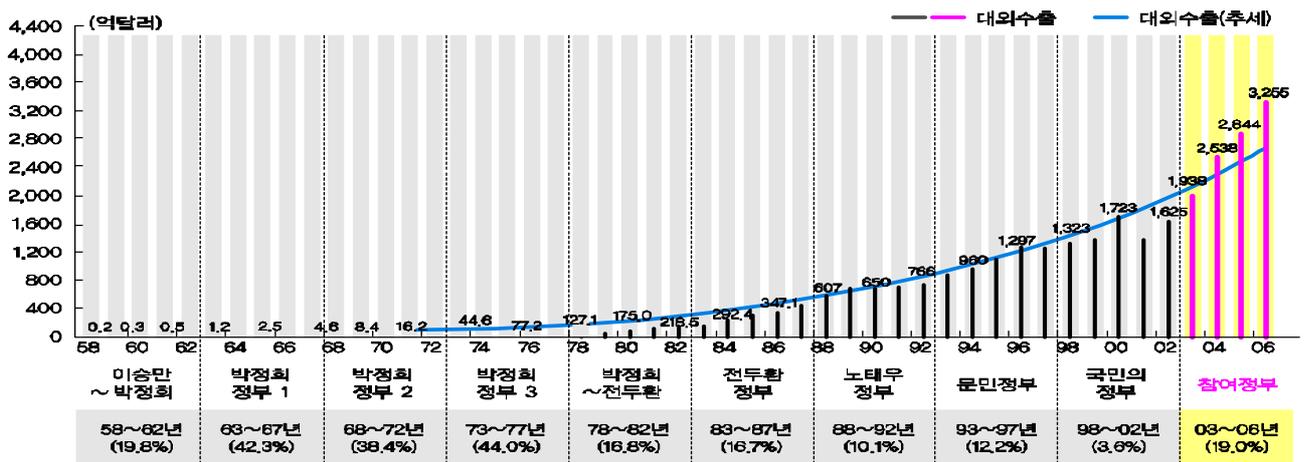
- 최근 WEF 국가경쟁력 평가(07.10)에서 한국의 전체 경쟁력은 세계 11위로 12단계 상승
- 기업혁신 및 성숙도도 세계 17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고 평가

구 분	종합 경쟁력 지수	3대 분야별 순위		
		①기본요인	②효율성 증진	③기업혁신 및 성숙도
'07	11위	14위	12위	7위
'06	23위	24위	21위	17위
'06년대비	+ 12단계	+ 10단계	+ 9단계	+ 10단계

□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고유가, 환율절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계 11번째로 수출 3천억불 달성(06년)

- 홍콩 등 중계무역국을 제외하면 G7과 중국만이 우리 앞에 있음



- 조선,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5위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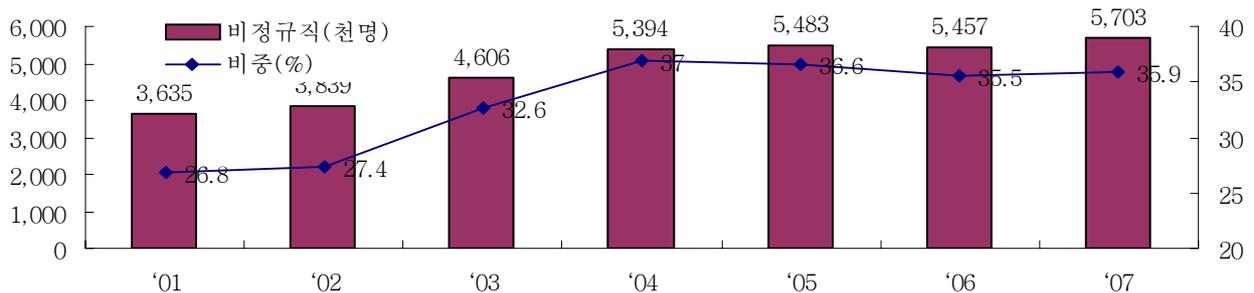
5-2. 비정규직 문제에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기술변화 및 국제경쟁의 가속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들의 비정규직 활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 '02년 사업체 패널조사(노동연) 결과 비정규직 활용 사유는, 대기업은 인건비절감(29%), 고용조정용이(36.2%), 중소기업은 인건비절감(34%), 고용조정용이(27%)

□ '04년을 기점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하향안정화 추세이고, 자발적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 임금·복지수준 상승 등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 '07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5,703천명, 임금근로자의 35.9%로 전년 동월 대비 246천명 증가



○ 전체 비정규직 중 자발적 취업 비중은 53.8%로 지난해에 비해 2.3%p 상승 (2,809천명→ 3,071천명, 262천명 증가)

○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대비 6.5% 증가로 정규직 증가율(5.2%)을 상회

(단위 : 만원,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기간제		
'06. 6~8월 평균	165.6	190.8	119.8 (62.8)	131.3	129.3	55.1	104.6
'07. 6~8월 평균	174.5	200.8	127.6 (63.5)	144.0	141.9	56.1	111.2
증감률	5.4	5.2	6.5	9.7	9.7	1.8	6.3

* () 은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

○ 퇴직금·상여금 등 근로복지 수혜비율도 전년대비 증가

(단위 : %)

	2006. 8.				2007. 8.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 임금근로자 >	54.6	55.3	42.4	43.7	57.5	55.9	43.3	49.8
○ 정 규 직	67.9	67.5	53.9	55.0	70.3	69.8	54.2	61.7
○ 비정규직	30.3	27.7	21.5	23.1	34.8	31.1	23.8	28.7

* 각 복지형태별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것임

□ 참여정부는 비정규직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도한 남용·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06년 국회를 통과

- 법 시행('07.7) 이후 우리은행 등 102개 사업장 2만6천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차별시정 구제신청도 점차 활발

* 노동위원회 차별신청 현황(11.6 현재) : 2,054명(26개 사업장) 접수

○ 공공부문의 올바른 비정규직 활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2차례('04, '06)에 걸쳐 마련·추진 중

- 비정규직 7만1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확정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 차별시정계획 수립과 함께 합리적 외주화 기준을 마련·시달

○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06.9)

* 주요내용 :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비정규직 친화적 고용서비스 제공 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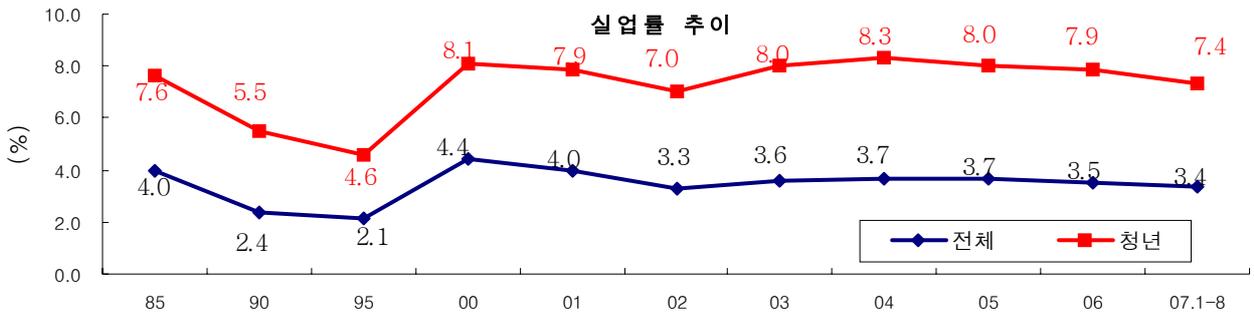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법안도 의원발의('07.6) 형식으로 국회에 계류중이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지속 실시

* '03~'07.10월 까지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13,267개소, 근로자 파견사용사업장 10,198개소 점검

□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5-3. OECD국가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청년실업률(15~29세)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7%대로 낮은 비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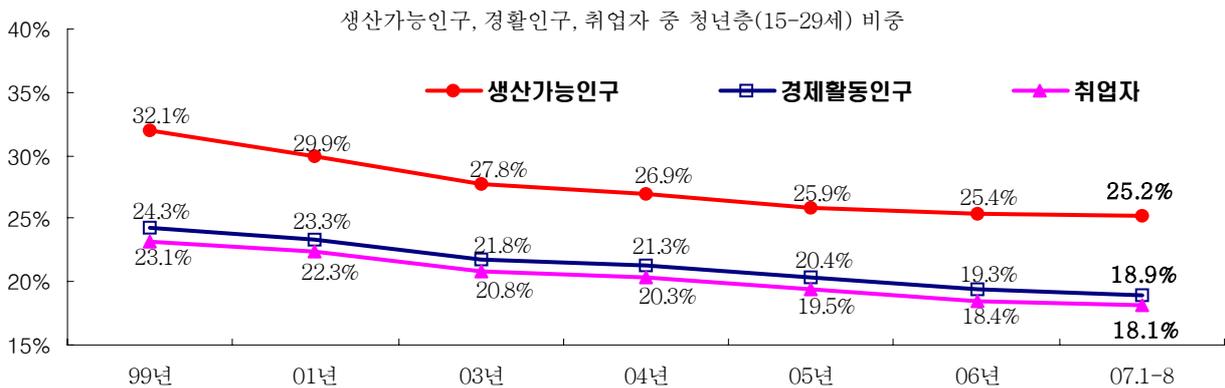


* 주요국의 청년실업률('06년, 15~24세) : 프랑스 23.9%, 독일 13.5%, 미국 10.5%, OECD 전체 12.5%
 * 졸업청년층 고용률(%) : 66.9('01) → 68.8('04) → 69.0('05) → 69.2('06)

○ 청년층 취업 소요기간도 '06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화 경향

* 졸업후 첫 취업 소요기간(개월) : 12('03) → 11('04) → 10('05) → 12('06) → 11('07)

○ 다만,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소 우려



□ 청년실업 해소는 우리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용 정책 목표이나 공통적으로 해결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 기업의 경력근로자 채용관행, 대기업·금융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수요측 요인뿐 아니라

- 고학력화에 따른 대졸자 공급과잉, 과도한 인문화 경향·진로지도 불충분으로 인한 눈높이 불일치, 양호한 일자리를 선호하는 취업준비생의 증가 등 공급측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

- * 대학진학률 : 우리나라 82.1%('06), 일본 49.1%('04년), 미국 63.4%('04년)
- * 주요기업의 취업경쟁률('06년)은 한국전기안전공사(사무직) 1,066대 1, 외환은행 164대 1인 반면 300인 이하 사업체 부족인원 ('06.4월)은 197천명에 이룸
- * 청년취업준비생 : 268천명('03) → 351('05) → 413('06) → 427('07.8)
- * 노동시장 최초 입직 연령 : 20.4세('02년) → 20.6세('04년) → 20.9세('06년)

□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전한 직업관·직업의식의 확립, 학력단계별 직업진로지도의 체계화 등을 통한 눈높이 불일치 해소, 대학의 구조개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청년층 고용촉진 지원 및 단기일자리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와 노동시장간의 이행원활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수립·추진

- 미취업 청년들이 근로의욕과 직업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고용촉진 지원 및 단기 일자리 사업 실시

- 직업탐색기간 단축을 위한 학력단계별 직업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실업발생을 사전 예방

- * 산학협력 중심대학('07년 23개 520억원),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06년 40개 공고, 50억원 → '07년 50개 공고, 70억원)

- 청년실업자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장기실업 방지를 위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서비스 제공

- * 청년대상 직업훈련 실시('04~'07.6월까지 24만명), 해외취업지원(17천명), '07년부터 YES 프로그램본격실시(3,000명)

- 특성화 전문계 고교 육성('06년 104개교), 대학별/학과별 취업률 조사('06년 363개 대학, 139개 대학원)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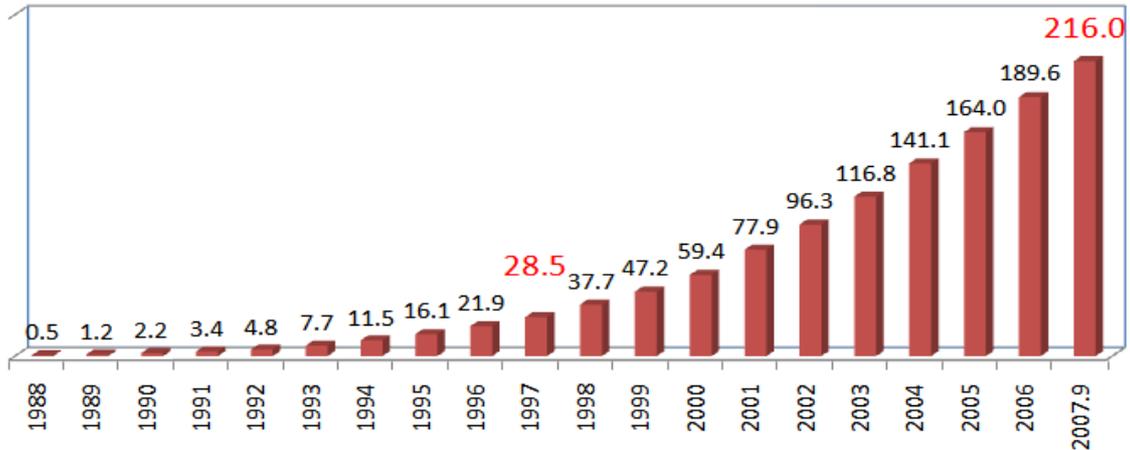
	(한나라당 주장) 걷어가는 정부만 있고 도와주는 정부는 없습니다.
6	⇒(반론) 참여정부는 소외계층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지난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예산을 증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 '02년 135만명, 3.4조원 → '07년 167만명, 6.2조원
 - * 보육예산 : '02년 57만명, 2,461억 → '07년 155만명, 1조 574억원
 - 장애인·노인 등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수당 수급자수를 늘리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
 - * 장애수당수급자수 : '02년 10만명 448억 → '07년 51만명, 3,130억원
 - 장애인·노인·여성 등의 기본적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산을 대폭 지원
 - * 사회서비스 예산 : '02년 2,722억 → '07년 1조 2,945억원
 - * 장애인활동보조인, 노인돌보미, 산모도우미 사업 시작('07)
-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는 지방과 함께 노력하였으며, 국고보조 사업 등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사업, 영유아사업에 복지수요와 재정력에 따라 40~90%까지 차등보조
 -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사회복지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부동산 교부세 배분기준에 사회복지 25%, 교육 20%를 포함
 - * 보통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반영비율 : '06년 31%→'07년 36%→'08년 40%
 - 특별시, 광역시 조정교부금 재분기준에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40%까지 확대
 -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으로 세원불균형 완화
 - * 區재산세중 일부('08 40%, '09 45%, '10년 50%)를 市稅로 전환, 자치구에 배분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도입, 국민연금 개혁 등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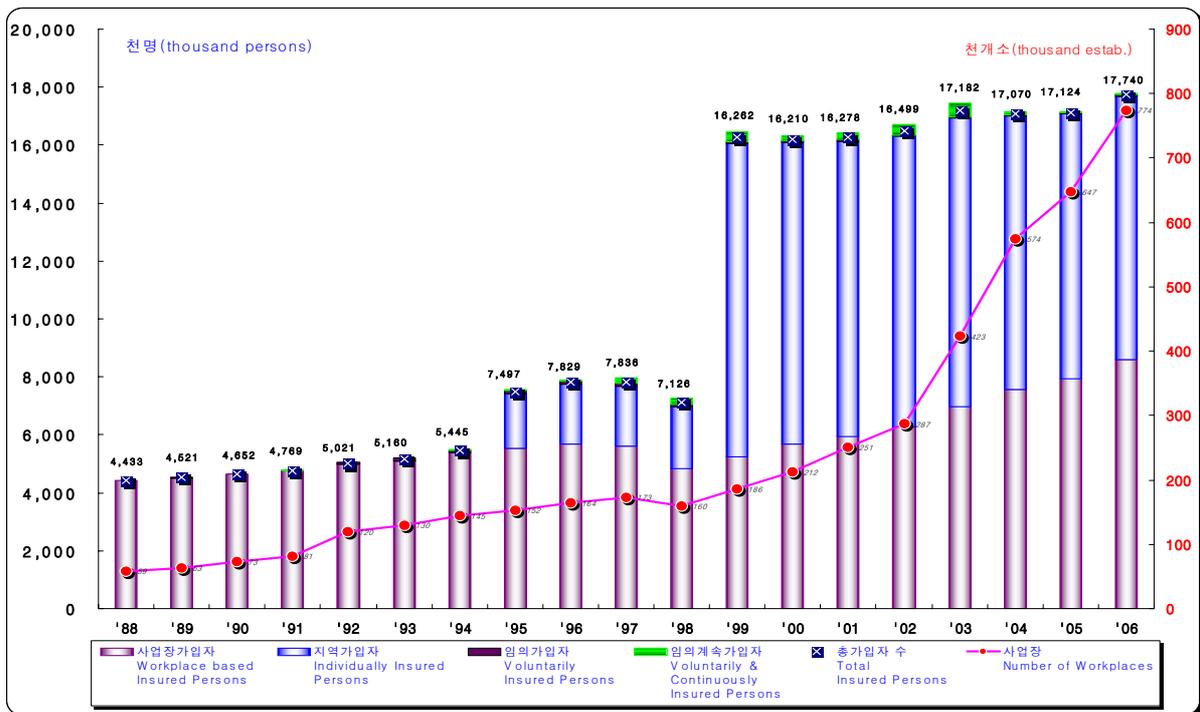
- '07년 9월말 기금자산은 216.0조원으로 '97년말 대비 7.6배 증가



- 가입자 : 총 1,774만명('06), 사업장 총 77.4만개소('06)

* 가입자 : (88년~97년) 784만명 → (98년~06년) 990만명

* 사업장 : (88년~97년) 17.3만개 → (98년~06년) 60.1만개



- 급여지급액 현황: 수급자 총 1,996천명('06), 총 4조3,602억('06)

* 수급자 : (88년~97년) 988천명 → (98년~06년) 1,008천명

* 수급액 : (88년~97년) 1조4,855억원 → (98년~06년) 2조8,74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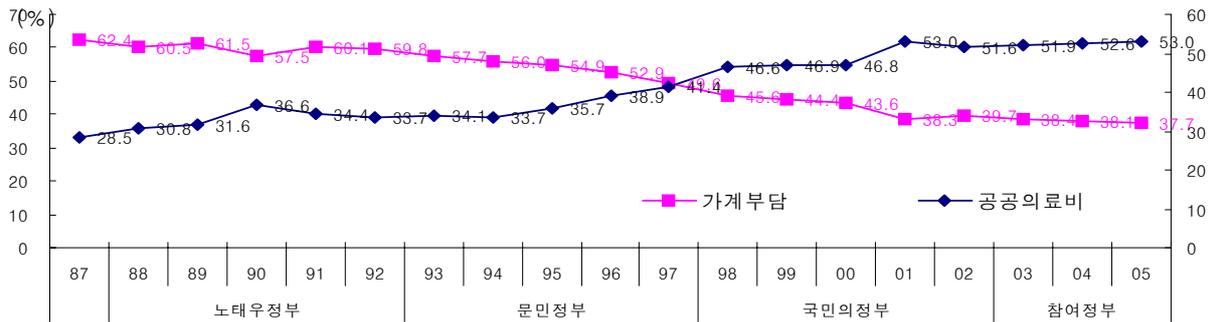
-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08.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실시

* 65세이상 노인중 공적소득보장 수혜율 : ('05년)33.1% →'08년 82%(국민연금19%, 특수직연금 3%, 기초노령60%)

o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학생, 군인,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으로 향후 소득 발생시에는 소급납부하고 수급자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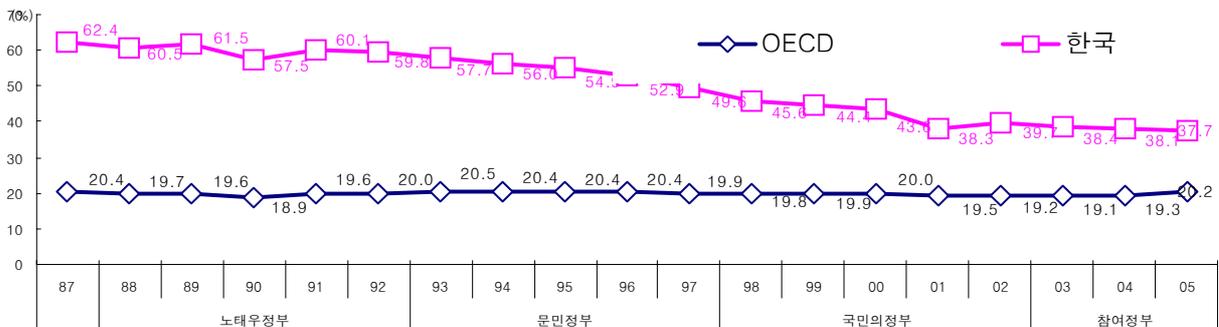
* 납부예외자(458만명) 주요사유 : 실직 및 휴직 74%, 사업중단 9% 등

o 건강보험도 질병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국민 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을 '87년 28.5%에서 '05년 53.0%까지 증가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로 전체 의료비 지출중 본인부담비율이 '87년 62.4%에서 '05년 37.7%로 낮아짐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로드맵('05~'08)에 따라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임신Totalcare·아동 건강투자 확대, 간호서비스 확대 등 추진 중



- '07.6월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813만세대 중 26.8%인 218만 세대가 체납자이나, 이들 대부분은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계층
- 체납자가 되더라도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빠지는 것은 아님
- '04년에는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바 있으며,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에서 지원

※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율 증가주장의 오류

◆ (한나라당 주장)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율 : (02)42.5 → (06) 52.8%
 ⇨ (반론) 제도개선 효과를 복지혜택감소로 왜곡한 것임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확대('03.7월 5인미만 사업장, '06.1월 상시 1인 이상 사업장)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

- 이로 인해 남아있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장가입자 : '02.1월 251천개소 5,952천명
 → '06년말 774천개소 8,605천명 (2,653천명 증가)

* 지역가입자 : '02.1월 10,180천명 → '06년말 9,086천명 (△1,094천명)

* 납부예외자 : '02.1월 4,476천명 → '06년말 4,936천명 (460천명 증가)

7	(한나라당 주장)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권리를 빼앗았습니다.
	⇨(반론)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언론통제정책이 아닙니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취재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 폐쇄적 부처별 출입처 제도 폐해 해소, 모든 언론에 대한 문호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자 함

* OECD 27개국중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3개국만 행정부내 기자실 설치

○ 어느 나라나 언론의 특종은 정부기관의 취재보다는 취재기자의 전문적 정보력과 취재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 ‘황우석 사건’을 파헤친 것도 부처출입 기자들이 아니라 출입처 개념이 없는 PD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있음

□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과거 권언관계의 유혹을 버리고, 정부와 언론이 떳떳이 가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 대언론 정보제공 등 취재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의 업무 가중은 국민 알권리와 직결된 것으로 불가피하며, 다만, 과거처럼 기자를 접대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 부담은 완전히 해소될 것임

□ 오보에 대해 과거와 같이 ‘기사 좀 빼달라’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언론중재신청·소송이 증가했습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의 언론 피해구제 비율은 75~92% 수준으로 과잉대응이 아니라 합당한 대응이었음을 보여줌

※ 2003년~2007년 언론중재위 조정·소송 현황(진행중 건수 제외)

연도	신청건수				신청 결과						피해 구제율
	계	정정	반론	소송	정정 보도문	반론 보도문	기고	기사 반영	무결과	진행중	
03	124	94	24	6	64	40			20	-	83.9%
04	156	79	73	4	26	91			39	-	75.0%
05	126	81	38	7	28	68	3	14	12	1	90.4%*
06	135	77	49	9	29	72	4	10	16	4	87.8%*
'07. 9	53	30	18	5	11	12	3	7	3	17	91.7%*

8	(한나라당 주장) 혈세먹고 비대해진 정부만 남았고, 국민통합 정부는 사라졌습니다.
	⇒(반론) 참여정부는 ‘작은 권한, 큰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이며,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 ‘작은 권한, 큰 서비스’를 지향함에 따라 정부인력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할 일 없는 공무원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 그간의 과소한 사회투자를 확충하고 이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 추구

○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FTA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 치안, 고용지원 등 대민 서비스 수준 제고

□ 참여정부 이후 공무원 증원,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재정규모, 공무원수, 복지지출 등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해도 작은 정부입니다.

① 재정규모(일반정부 기준, '05년) : GDP 대비 28.9%

* OECD 국가 28개국(평균 40.8%) 중 28위

② 복지지출 규모(공공사회지출, '03년) : GDP 대비 5.7%

* OECD 평균의 1/3 수준, 최하위

③ 조세부담률('05년) : GDP 대비 20.2%

* OECD 국가 30개국(평균 26.9%) 중 26위

④ 국민부담률('05년) : GDP 대비 25.5%

* OECD 국가 30개국(평균 36.2%) 중 29위

⑤ 국가채무 비율('06년) : GDP 대비 33.4%

* OECD 국가 28개국 평균(77.1%)의 절반수준

⑥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06년) : 한국 2.8%

* OECD 국가의 1/2~1/3 수준

8-1. 중요한 것은 정부규모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참여정부 들어 증원된 인력의 대부분은 대민 서비스 분야입니다.

- 증원된 국가공무원 58,206명 중 약 84%는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 서비스 분야 인력임

• 교원	(29,262명)
• 경찰·교정	(8,488명)
• 고용·근로장려	(4,403명)
• 보건환경 등	(3,745명)
• 우편집배원	(2,694명)
• 행정기관 신설	(1,333명)
• 기타	(8,281명)



□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학급당 학생수 감소 (34.9명→30.9명), 교육의 질 제고 < 미국 23.1명 / 영국 24.3명 / OECD 평균 21.4명 > 	<table border="1"> <caption>초등 학급당 학생수 (명)</caption> <tr> <th>연도</th> <th>학생수</th> </tr> <tr> <td>'02</td> <td>34.9</td> </tr> <tr> <td>'03</td> <td>33.9</td> </tr> <tr> <td>'04</td> <td>32.9</td> </tr> <tr> <td>'05</td> <td>31.8</td> </tr> <tr> <td>'06</td> <td>30.9</td> </tr> </table>	연도	학생수	'02	34.9	'03	33.9	'04	32.9	'05	31.8	'06	30.9
연도	학생수													
'02	34.9													
'03	33.9													
'04	32.9													
'05	31.8													
'06	30.9													
고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 취업률 향상 (17.9%→25.7%), 고용기회 확대 ※ 2,411명 증원 	<table border="1"> <caption>실업자 취업률 (%)</caption> <tr> <th>연도</th> <th>취업률</th> </tr> <tr> <td>'02</td> <td>17.9</td> </tr> <tr> <td>'03</td> <td>16.7</td> </tr> <tr> <td>'04</td> <td>19.6</td> </tr> <tr> <td>'05</td> <td>21.7</td> </tr> <tr> <td>'06</td> <td>25.7</td> </tr> </table>	연도	취업률	'02	17.9	'03	16.7	'04	19.6	'05	21.7	'06	25.7
연도	취업률													
'02	17.9													
'03	16.7													
'04	19.6													
'05	21.7													
'06	25.7													

□ 참여정부 기간중 인력보강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모는 선진국의 1/3 수준이며, 증원비율도 과거정부보다 낮습니다.

○ 우리 정부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수준(OECD 국가의 1/2~ 1/3)

*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 : 한국 2.8%, 일본 3.5%, 미국 7.0%, 프랑스 7.8%, 영국 7.9%

○ 참여정부 공무원 증원 비율(연평균 1.7%, + 14,623명)은 과거 정부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음

- 문민정부(1.0%) 및 국민의 정부(△0.7%)보다는 높으나, 노태우 정부 이전(2.7%~7.8%)보다는 낮은 수준임

□ 기능이 쇠퇴한 분야 인력을 감축하고 재배치했습니다.

○ 행정 수요 감소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전환 및 재배치 (참여정부 기간 동안 총 5,606명)

* 참여정부 국가공무원 증원(철도청 제외한 28,450명) 대비 전환·재배치 비율(약 20%)

○ 증원요구 인력 중 인정비율은 약 1/3 정도로 불요불급한 증원은 최대한 억제 (증원요구 총 180,209명, 인정 총 58,206명)

※ 한나라당 등의 ‘위원회 공화국’ 주장의 오류

◆ “권위주의 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 민관 협치의 필요 등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위원회 활성화가 불가피

○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의 활용, 국민의 정책 결정 참여 기회 확대로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 참여정부 출범후 총 52개 위원회가 증가되었으나, 대부분(43개)은 자문위원회로 관련 인원·예산증가가 크지 않음(위원회 총수 416개)

* 12개 국정과제위 사무처 인력은 '07.11 현재 182명 수준('04년 대비 40% 축소)

* 미국 연방정부(2004년 기준)는 54개 기관에 948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9	(한나라당 주장) 오직 핵만 있을 뿐, 주권과 안보는 없었습니다.
	⇒(반론)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 포괄적 방식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일관된 정책추진 결과 9.19 공동성명, 2.13합의, 10.3 합의 등의 성과를 거둠
 - 이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 우리나라가 배제된 북미 제네바합의, 남북관계 악화와 대조적 상황임
-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제 남북관계는 경제공동체, 평화체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분단과 냉전의 반세기를 마감하고 교류협력의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척한 의미. 이를 통해 금강산, 개성이 열리고 각종 교류협력이 급격히 증가함
 -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은 교류협력단계를 넘어 평화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남북연합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
- 어느 정권보다 많이 한미간 현안과제를 해결했습니다.
 -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비자 면제 등 장기 현안 과제를 해결
-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외교부장관이 UN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은 한미관계를 비롯한 우리의 주변4강 정책, 실용적 균형 외교정책이 국제적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1. 북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진입했으며, 경험확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합의」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핵시설 폐쇄·봉인,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등의 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 북핵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차단되고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성과
- 불능화 이후 다음 단계인 북핵 폐기가 본격 논의되면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이는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일관된 정책 추진의 결과입니다.

- 한나라당, 일부 언론 및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책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
- 참여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등 위기 상황에서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 파국을 방지하고 평화 기조 정착
- 특히,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을 통한 「2.13 합의」 도출, BDA문제 해결 등 교착 상태마다 끈질긴 노력으로 주도적으로 돌파구 마련
-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 관계와 6자회담의 선순환 발전 원칙”을 지켜냈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러한 선순환을 작동시킴

※ 참여정부가 북핵개발을 두둔했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반론

◆ 북핵문제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심화되었고, 미국과 북한의 강경책으로 핵실험까지 전개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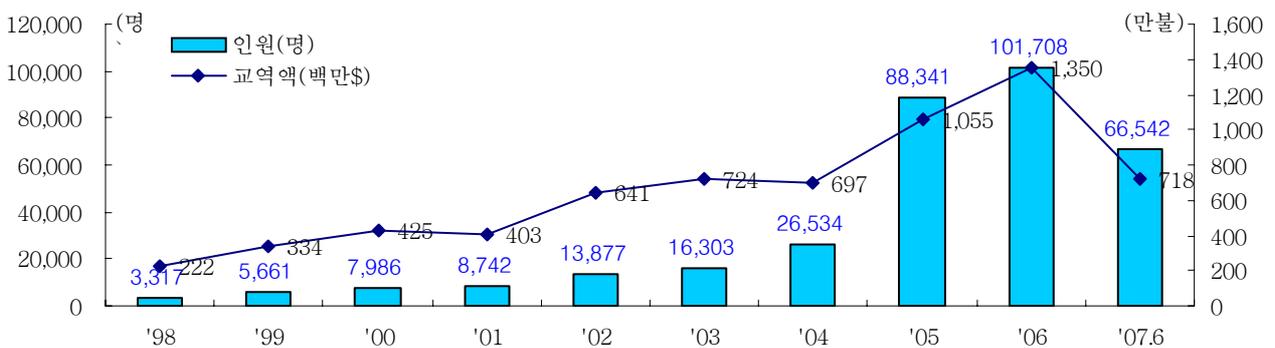
-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대북 강경책을 고집했다면 오늘날의 북핵 문제는 파국으로 전개되어 한반도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을 것.
- 강경책을 펴다가 북핵해결의 가닥이 잡히자 ‘신포용정책을 펴겠다’면서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은 기회주의적 태도

□ 남북경협은 현재의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북측은 경제회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등 상호 이익 창출이 가능
- 남북간의 경제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향후 통일의 시점에서 깊어질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

□ 인적·물적 교류를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남북 왕래인원은 남북 도로연결, 개성공단 개발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06년에는 연간 왕래인원 10만명 돌파
- 남북교역은 '05년도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속 증가세



□ 개성공단 등 3대 경협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개성공단 1단계 330만m² 개발은 마무리 단계, 본격 운영 단계 진입
- 도로는 '02.9 착공, '04.12부터 운행, 개성공단 개발·금강산 관광에 이용하고 있으며, 철도는 '02.9 착공하여 '05.12 궤도부설공사를 완료

* '07.5.17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구간의 철도시험운행을 성공적으로 실시

- '98.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03.9월부터 개시된 육로관광에 힘입어 관광객이 크게 증가, '07.6월 누적관광객 150만명 돌파

※ 지난 10년간 북한에 11억 달러를 퍼주었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따른 민간기업의 정상적 상거래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사실을 과장·왜곡

9-2. 한미동맹체제는 성숙되고 있습니다.

- 참여정부는 양국간의 신뢰 기반하에 어느 정부보다 많은 한미 동맹 현안을 해결했습니다.
 -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비자면제 등 장기현안과제들을 해결
 - 참여정부 대미정책은 한국의 국력신장과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도 원했던 것
- 20년전부터의 과제인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2012.4.17)는 20년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으로 세계 10대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 국군의 숙원사업임
 - 2012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 주도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
-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한미동맹이 지난 50년의 성과를 뛰어넘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동맹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 한미간에 어려운 과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향후 50년을 위한 미래 지향적 동맹 재조정 완수
 - 한·미 FTA와 더불어 참여 정부 기간 중 한미동맹 조정 과정은 21세기 포괄적·역동적·호혜적 한미동맹관계 구축을 위한 초석
- ※ 전작권 이양에 따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의 오류
 -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에서도 한미 군사협조체제에 의한 동맹 방위 태세는 지속될 것임
 -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미군의 보완전력 (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추진

10	(한나라당 주장) 법은 비리와 권력남용을 피해 갔습니다.
	⇒(반론) 참여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정상화하였습니다.

- 참여정부는 탈권력, 탈정치를 권력기관 변화의 출발점으로 제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을 정상화하였습니다.
 - ‘법과 원칙’은 대통령이 주요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권력기관에 전달한 유일한 지침
 - 국정원에 대해서는 정치개입을 막고 정치 관련 보고서를 일절 보지 않겠다고 천명
 -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등을 통해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
- 오일게이트, 바다이야기 등 수 많은 권력형 비리가 제기되었지만, 검찰·특검수사결과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참여정부 출범이후 한나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내용은 없음
 - 무차별적 특검 실시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국력을 소진한 측면
- 특별사면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 있게 실시하였으며, 과거 정부에 비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역대 정부 사면 횟수 및 대상자 수>

정 부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기 간	'88~'93	'93~'98	'98~'03	'03~'06
총 횟 수	7	9	7	7
대상자 수	9,643	2,626,805	76,527	39,818
운전면허 별점·징계사면	-	4,427,000	10,302,184	4,332,599

10-1. 참여정부기간중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돈·관권선거가 없어졌습니다.

□ 정경유착 고리가 차단되고 정치부패가 근절되어 이제 기업이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대선자금수사 등을 통해 정경유착을 해소하는 한편, 정치자금 투명화, 소액다수 기부문화 정착 등을 통해 부패정치 청산
- 청렴위 등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투명사회 협약('05년)을 통해 사회적 투명성의 전기 마련

□ 돈선거·관권선거가 사라지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 제정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돈선거와 관권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 제도 확립

* 부패지수 개선 : ('03) 50위/133개국 → ('06) 42위/163개국

□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를 분권적 탈권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 의회의 대통령견제, 당정분리, 주례보고 폐지, 국민경선, 상향식 공천 등을 통해 탈권위 및 일인지배 정치문화를 종식
- 최초의 현직 대통령 선거자금 수사 수용, 여당총재 직위 포기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정치적 자유 확대

* 아시아에서 정치적 민주주의 1위(미국 프리덤 하우스, '06.9월 발표)

- 의회·법원·헌재·행정부간의 실질적 권력분립을 달성

앞으로의 10년

- 지난 10년은 외환위기로 폭발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 진입을 준비한 10년입니다.
 - 카드채, 부동산 등 시행착오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혁신주도형 경제, 능동적 개방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음
 - 국민소득 2만불, 수출 3,200억불, 출산률 회복, 소득분배 개선 등 구체적 지표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반증
- 현재 국민들은 외환위기 극복, 선진국 진입과정에서의 구조적 변화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사회투자 국가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노후불안, 교육문제 등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로 사회복지 효율성 제고, 인적자원 강화 등 복지·성장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 과거로 회귀하는 국가전략으로 되돌아가서는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성장일변도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단기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성장잠재력 훼손·소득분배 악화 등 경제위기 초래
 - 수구냉전적 남북대결구도와 외교정책은 한반도의 리스크를 확대하여 경제·사회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치명적임
- 앞으로의 10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성과는 계승하고 시행착오는 보완하는 발전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 '잃어버린 10년', '좌파정부'식의 흑색선전을 지양하고, 참여정부의 성과와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객관적 정책토론 필요